



성명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입장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반대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회의석상에서 유네스코 측의 권고에 따라 당시 일본 정부의 대표인 유네스코 대사 발언을 통해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와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에 반하는 자료를 도쿄 소재 일본 산업유산 정보센터에 전시하고 있어 유네스코 측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덧붙여 2021년 7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2015년 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사실이 있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 신청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모순일 뿐 아니라 유네스코와 피해 당사 국가 및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둘째, 일본은 사도광산을 센코쿠 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 금 채굴 유산으로만 한정하여 신청하지만 외관은 물론 내부에서 채굴 장소에 이르는 길은 모두 다 근대 이후의 시설일 뿐 아니라 그 길은 태평양전쟁 중 군수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구리 등을 채굴하기 위해 닦아놓은 길이다. 이것은 바로 조선인 강제노동의 결과이며, 그 증거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최한 「일본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역사 왜곡」 학술 세미나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금산’에 이르는 길을 생략하고 어떻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따라서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full history)’에 대한 언급 없이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셋째, 세계유산은 빛나는 것이나 어두운 것이나 ‘보편성과 양심’에 기초한 것이라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전체의 역사를 기술할 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국가들이 수긍하지 않는 한 ‘조각난 일부의 역사와 진실이 가려진 탁월성’만을 담은 등재 신청이라면 결코 모두의 인정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일본 내의 정파적 판단에 따라 등록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진정성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편성을 지향하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위와 같은 근거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반대하며,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2월 1일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